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통일정책 변화: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전 미 영*

I. 서론

대남·통일정책 변화

II. 로동신문의 내용분석

IV. 결론

III.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일정권의

Abstract

Kim Jong-il Administration's South Korea Policy : Analysis of 'Rodong Sinm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South Korea Policy focu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Newspaper, 'Rodong Sinmun'. The content analysis of 'Rodong Sinmun' is based on analysis of editorial article and slogan.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North Korea's perception of South has changed and North Korean traditional policy, 'Strategy of South Korea Revolution', was virtually abolished. The main factors which changed the policy are international environment, domestic economic deadlock and the rise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As the situation turned out unfavorable

for North Korea, South Korea policy of North Korea pursued the practical purpose. If North Korean aim of the policy toward the South is to seek the maximum profit, it seems a realistic choice to make North Korea to make more profit by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 than arousing conflicts and hostility.

Consequently, it is true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 has many unstable factors. On the other hand, it is undeniable that Kim Jong-il Administration wants to improve it. This means that they have taken to the stage not to go against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the regime maintenance.

Key Words: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 Unification Policy. South Korea Policy. Perception of South Korea.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I. 서론

이 논문은 로동신문이라는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의 변화 과정을 검토해보고 남북화해협력 시대의 북한의 변화 양상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3년간의 유혼통치기간을 거쳐서 1997년 10월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에 취임하였다. 김일성 사후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해왔던 김정일이 그의 통일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혼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통해서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김일성의 통일정책의 노선을 따를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998년 남한에서 대북포용정책 추진을 천명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대외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김정일의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분석시기 동안 로동신문의 대남통일관련 <사설>과 로동신문에 실린 <구호문>을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 대남통일정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신문에서 사설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사의 종류이다. ‘당의 지시서’ 또는 ‘지령서’로 일컬어지는 로동신문 사설은 “매 시기 당의 방침과 의도를 민감하게 받아 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신속히 해설침투하며 그들을 당의 방침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신문의 가장 위력한” 기사형태이다. 사설은 신문의 얼굴이므로 신문의 정치사상적 입장은 무엇보다도 사설에 의해 대변되며 천명된다. 또한 사설은 당의 노선과 정책, 매 시기 당의 방침과 의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내외 문제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게 된다. 로동신문의 대남·통일 관련 사설은 연평균 10편 내외로 그 게재 빈도에 있어서는 적은편이나 북한당국의 통일정책의 방향을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의 로동신문의 대남·통일관련 구호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로동신문은 신문지상에 다양한 주제의 많은 구호문을 게재하

고 있다. ‘구호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호를 통해 대중들에 대한 상징조작을 확산시켜온 북한체제에 있어서 신문 매체 또한 구호문을 통해 대중들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평균 2건 내외의 구호문이 로동신문에 실리고 있으며, 이 구호문은 그 시기의 북한사회에 전파되는 선전구호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구호의 변화추이를 보는 것은 북한당국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들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선전선동 내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평가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로동신문의 사설이 정책 지침이나 방향 등 정권의 의지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반해, 구호문은 그때그때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면에서 북한당국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신문의 사설과 구호문을 통해 정책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당의 선전자적 기능’을 1차적 기능으로 삼고 있는 북한 신문의 특성상 사실의 진술보다는 선전선동성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실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점에서 북한당국의 정책의지와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로동신문이 가장 중요한 실증자료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일정한 기간 동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로동신문이 갖는 자료적 가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로동신문의 사설과 구호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 방법은 주제별 빈도분석과 신문기사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한 내용분석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의 분석 시기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으로 상징화되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정책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로동신문의 대남관련 <사설>과 <구호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대남정책의 전개과정과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양상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로동신문의 내용분석

1.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로동신문의 대남·통일관련 기사는 총 50건으로 각 년도 별 게재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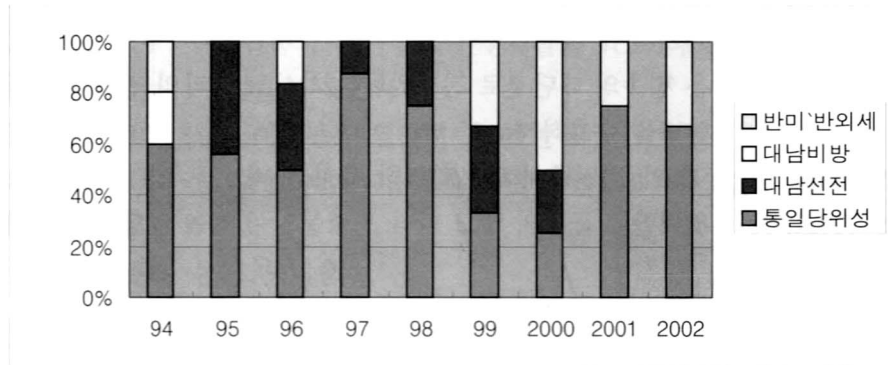
<표 1> 로동신문 대남·통일관련 사설의 게재빈도: 1994~200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합
전체 사설	75	77	62	76	50	55	53	51	101	600
대남·통일관련 사설	5	9	6	8	7	2	3	4	6	50
백분율(%)	6.7	11.6	9.7	10.5	14.0	3.6	5.7	7.8	5.9	8.39

분석기간 동안의 통일관련 로동신문 사설은 전체기사 대비 평균 8.39% 정도 게재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남북관계가 냉각되었던 1990년대 중반부 통일대남 관련 사설 비중이 높았던 데 비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화해무드로 진행되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부에는 오히려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로동신문의 통일관련 사설이 대남 공세적 입장에서 국내외적 선전효과를 고려해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남한의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하여 북한의 대남통일 사설은 게재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남통일관련 사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각 시기별 사설의 주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게재된 주제는 ‘통일의 당위성’(33회)에 관한 것이며 다음으로 ‘대남선전’(9회), ‘반미·반외세’(7회), ‘대남비방’(1회)의 순이다.

<그림 1> 로동신문 대남통일 관련사설의 주제별 분포도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는 ‘민족대단결론’, ‘연방제통일방안 실현’, ‘우리민족끼리 관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미·반외세 관련 사설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반비례하여 게재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주민의 투쟁을 독려하는 대남 선전성 사설과 남한 비난을 주제로 한 사설이 급감하고 있다. 분석시기 동안의 대남통일 사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 개의 소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시기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남한의 정권교체, 그리고 ‘6·15공동선언’이라는 세 변수를 고려하여 1994~1997년, 1998~1999년, 2000~2002년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가. 1994~1997년

(1) 주요 사설

- 19940301, 06 ·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자
- 19940406, 02 · 전민족의 대단결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자
- 19940625, 01 · 대결과 분렬을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 19950406, 01 ·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19950505, 01 ·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90년대 통일의 돌파구를 열자
- 19950818, 01 · 민족통일대축전을 90년대 연방제통일로 이어가자
- 19960301, 02 · 민족의 대단결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 19960722, 01 ·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자
- 19960817, 01 ·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드높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19970419, 01 · 민족자주, 평화수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아가자
- 19970625, 01 · 온 민족의 대단결로 전쟁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수호하자
- 19970814, 01 · 제8차 범민족대회를 열렬히 축하 한다
- 19970821, 01 ·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겨 이룩하자

(2) 사설의 논제와 내용

주제 분야	중심 논제	주요 내용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대단결 재강조 · 북남해외의 통일단체 중심의 통일- 범민련 확대 강화 · 연방제통일방안의 실현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관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94.7.4)
남북관계 및 대남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세의 위협에 민족공조로 대처 · 조문파동 비난, 남북관계의 냉각 · 통일전선결성 강조-범민련을 중심 · 남한당국에 대한 비난 강화 	<p>“남조선의 현 정권은 력대퇴퇴정권 가운데서도 가장 외세 의존적이고 반민족적인 매국정권, 분렬정권”(94.4.19)</p> <p>“김영삼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이 불가능”(95.3.1)</p>
대미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의 관계개선 희망 · 미국에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청 	“만일 미국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온다면 우리도 ..조미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94.6.25)

나. 1998~1999년

(1) 주요사설

- 19980221, 01 ·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 19980301, 01 ·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이룩하자
- 19980406, 01 ·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 민족자주,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겨 이룩하자

- 19980419, 01 · 거족적인 투쟁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자
 19980505, 01 ·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구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19980625, 01 · 온 민족의 대단결로 전쟁재발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자
 19980814, 01 · 통일대축전을 열렬히 축하 한다
 19990301, 01 · 민족자주의 기치 밑에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2) 사설의 논제와 내용

주제 분야	중심 논제	주요 내용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대단결 5대 방침 구현 통일 · 남조선정치인들에게 선행실천사항들을 처리하고 북의 제안에 나서기를 제안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 것이다”(98.5.5)
남북관계 및 대남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당국에 화해협력을 제의 ·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 희망 ·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기대 표명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을 비롯하여 그 누구와도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98.2.21) “우리는 남조선집권층이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98.4.19)
대미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세 철수, 통일의 선결과제 · 미국의 조선적대시정책은 침략적 · 미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시자 	“미국의 강경보수 세력은...우리 인민군대의 강의한 의지와 백철불굴의 정신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98.6.25) “남조선 자주화투쟁의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외세이다”(99.4.19)

다. 2000~2002년

(1) 주요 사설

- 20000301, 01 · 거족적인 반외세, 반괴뢰투쟁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20000419, 01 · 거족적인 투쟁으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20000518, 02 · 대중적인 반미항전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안아오자
 20010301, 01 ·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전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

하자

- 20010615, 01 ·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 나가자
 20010625, 01 ·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20010902, 01 · 통일애국투사들은 우리 당과 민족의 자랑
 20020301, 02 · 반외세,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자
 20020615, 01 ·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자
 20020625, 01 ·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20020704, 01 ·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실현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
 20020804, 01 ·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2) 사설의 논제와 내용

주제 분야	중심 논제	주요 내용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세배격, 민족공조로 통일 · 민족화합, 협력과 교류 · 우리민족끼리 관철 ·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그 방향에서 통일 지향 	<p>“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일애국력량의 화합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01.3.1)</p> <p>“북남공동선언은 장군님의 통일의지와 민족자주의식의 결정체”(01.3.1)</p> <p>“민족대단결이 미제침략책동을 짓 부시는 열쇠”</p>
남북관계 및 대남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 · 협력과 교류를 통한 통일지향 · 남한당국 비난 없음 	<p>“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거족적 단결의 시대”(01.3.1)</p> <p>“정세가 어떻게 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02.3.1)</p>
대미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세 철수, 통일의 선결과제 ·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는 투쟁을 벌이자 · 미국의 조선적대시정책은 침략적 	<p>“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침략자, 살인마이며범죄의 무리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00.3.1)</p> <p>“미제의 반공화국대결책동과 새전쟁도발책동은 현 부시행정부에 와서 더욱 로골화 약탈화”(02.6.25)</p>

2. 로동신문 <구호>의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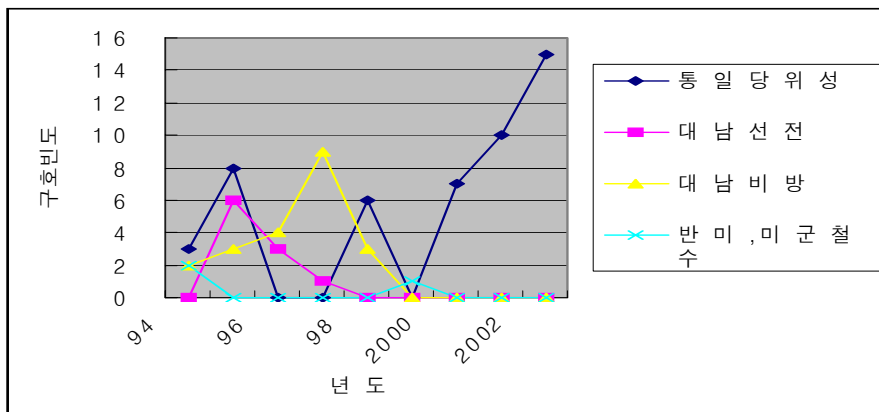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로동신문의 대남통일관련 <구호>를 크게 네 주제, 즉 ‘통일의 당위성’, ‘대남선전’, ‘대남비방’, ‘반미, 반외세’로 분류하였다. 분석 시기동안의 각 주제별 구호의 게재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로동신문 대남·통일 구호의 주제별 빈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합
통일당위성	3	8	0	0	6	0	7	10	15	49
대남선전	0	6	3	1	0	0	0	0	0	10
대남비방	2	3	4	9	3	0	0	0	0	21
반미·반외세	2	0	0	0	0	1	0	0	6	9
총합	7	17	7	10	9	1	7	10	21	89

이 기간 동안의 로동신문의 대남·통일관련 구호문은 주제별로 통일당위성 호소(49회), 대남비방(21), 대남선전(10회), 반미·반외세(9)의 순으로 주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호소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구호문은 2000년 6·15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급격히 늘어난 반면, 같은 시기 대남선전용 구호문과 대남비방성 구호문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로동신문 대남·통일 구호의 주제별 기사 추이



구호문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당위성’에 관한 구호의 내용을 보면, ‘민족대단결, 민족단합을 통한 통일론’(25회), 통일전선(7), ‘우리민족끼리’(5회), ‘통일과 지도자 우상화’(5회), ‘연방제통일방안의 고수’(4회), 기타(3)의 순으로 게재되었다. 각 연도별 대표적 구호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41012, 05 · 조선은 연방제 방안에 따라 통일되어야 한다
- 19941016, 05 ·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 19950810, 05 · 통일대축전으로 90년대 통일의 돌파구를 열자
- 19950812, 05 ·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 이룩하자
- 19960602, 05 ·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체계는 수립되어야 한다
- 19960630, 05 · 남녘겨레는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노래한다
- 19970404, 05 · 《문민》의 탈을 쓴 괴뢰역도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버려야 한다
- 19970427, 05 · 조선은 연방제로 통일 되어야 한다
- 19980502, 05 · 전민족의 대단결로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
- 19980510, 05 ·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애국애족의 통일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우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 19990916, 06 ·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 20000615, 04 ·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 20000810, 05 ·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철저히 실현하자
- 20010112, 05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 20010113, 05 · 6·15북남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가자
- 20020104, 05 ·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 20020106, 05 ·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 20020219, 06 · 부쉬행각 저지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Ⅲ.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일정권의 대남·통일정책 변화

1. 대남인식의 변화

과거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개념 중 하나가 ‘적대적 의존관계’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남북간이 상대방과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 조성을 통해서 이를 대내적 단결과 통합, 혹은 정권 안정화에 이용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남북 모두 적대적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당국은 남한과의 긴장 조성과 적대의식의 고취를 대내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관계에 부여되는 의미가 북한당국에게 있어서도 다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남한 정권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권수립 후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 남한당국을 ‘괴뢰도당’ 등으로 규정하며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70년대 초반,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국제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협상이었으며 따라서 남북 당국간 관계는 곧 냉각되었다. 노태우 정부시기에 들어와 북한당국은 남한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 북한 당국의 정책은 국내의 일부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공존’ 지향적이었기 보다는 ‘현상유지’ 지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 즉 북한은 남한인들 가운데서도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도 흡수통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개인이나 단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남한정부당국은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도 남한당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로동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북한당국은 당시 김영삼 정부를 “김영삼 괴뢰도당”, “김영삼 역도”, “문민의 너울을 쓴 매국노” 등 비난 일색의 발언으로 일관했으며, 김영삼 정권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¹ 정성장, “북한의 통일 및 대남정책 목표의 변화 연구,” 『고향정치학회보』, 제2집 (1999), p. 182.

김영삼반역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으며 동족이 전쟁의 참화를 들쓰는 것도 피할 수 없다.²

특히 김일성 사후 남한에서 조문파동이 발생하자 북한당국은 “뜻밖에 발생한 동족의 유고에 민족성원으로서 조의예절을 지키지 않고 아픈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1998년 남한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북한당국은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단합할 것을 천명하는 등 남한당국과의 관계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³

물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남한당국과 남한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를 ‘김대중 도당’, ‘국민 통치배’,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며 비난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김대중 정부 초기의 ‘햇볕정책’을 ‘대결론’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뜨겁게 분출하고 있는 때에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상호주의와 햇볕론이라는 대결론을 부르짖으며 반북대결전쟁정책으로 북남관계를 극한점으로 말아가는 남조선 괴뢰들의 반통일, 반민족적 책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⁴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그 비난의 횟수는 물론 비난의 강도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를 ‘현 집권자’, ‘남조선 집권자’ 등 비적대적인 용어로 지칭하기 시작했으며 6·15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급감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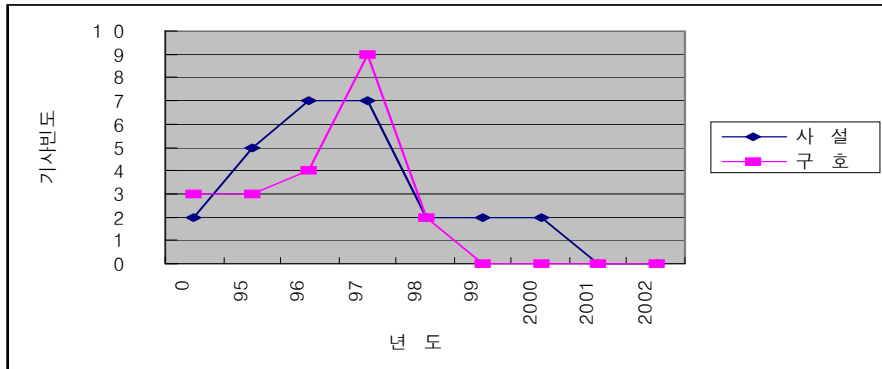
² 『로동신문』, 1995년 5월 5일.

³ 『로동신문』, 1998년 5월 5일.

⁴ 『로동신문』, 1998년 8월 14일.

⁵ 과거 1972년 남북 대화가 추진되던 시기에도 로동신문 지상에서는 남한당국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남북회담과 7·4남북공동성명이 준비되고 있던 그 시점에 도 로동신문은 “박정희 괴뢰도당”의 “파쇼폭압”을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북한당국의 남한 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림 3> 사실과 구호에 나타난 남한정권 비방기사의 빈도추이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남한당국을 진정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북한이 처한 구조적 환경에 따라 대남화해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에 가능한 변화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북한당국이 당시 남한정부와 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는 햇볕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남한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북한당국의 대남정책은 남북대화 재개에 응하고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등 전향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흡수통일 포기, 정경분리,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 활성화, 북한의 국제 사회 진출 협조 등을 통해 꾸준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대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남한당국과 반북세력을 원칙적으로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즉 북한당국은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과거와는 달리 남한당국과 남한 내 ‘반북세력’의 통일정책을 원칙적으로 분리시키고 있으며 ‘반 통일세력’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당국은 남한당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 실제로 북한으로서는 경제회생을 위한 개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필수적이다.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태에서 북한이 외부의 투자와 경제지원을 얻어내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

나라 북한에게 남북경협 성공은 그 자체로 큰 이익이 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에게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의 대남정책이 대결과 분쟁양상을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다. 6·15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서해교전 유발을 통해 남북관계를 냉각시킴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과거와는 달리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2. 민족대단결 통일논의의 확대

김일성 사후 1994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5차 범민족대회의 진행과정은 김정일이 김일성과 동일한 통일전선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냈다.⁶ 로동신문은 동년 1월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통해 민족대단결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4월 6일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 1돌을 기념하며 게재된 <전민족의 대단결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자>라는 사설을 통해서 민족의 대단결을 호소했다. 이어 11일 북한당국은 <공화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8월 15일을 계기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전민족의 대단결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제의하였다.⁷

민족대단결론은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민족대단결론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4월 7일 김일성 명의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김일성은 1993년 4월 최고인민위원회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룡성 번영을 위해 모두 다 특색 있는 기여를 할 데 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을 천명”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 10대 강령’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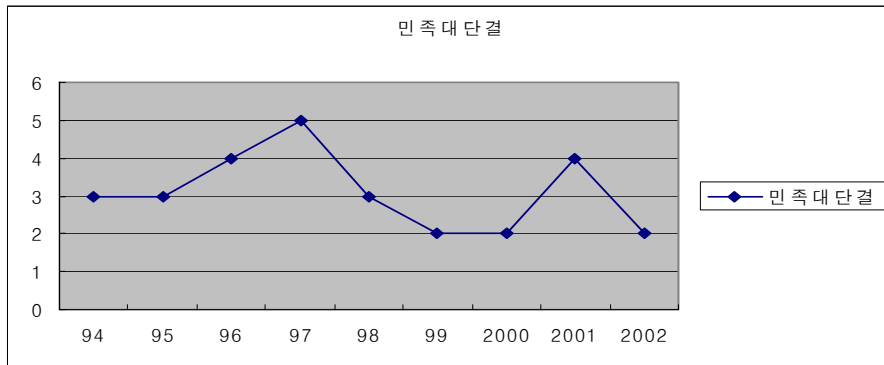
1995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당국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민

⁶ 최완규,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 변화 요인과 방향연구, 1994~1998- 북한 국내정치와 대남 정책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안보학술논집』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8), p. 179.

⁷ 『로동신문』, 1994년 4월 19일.

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이념 밑에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굳게 단결하여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4> 로동신문 사설의 ‘민족대단결’ 언급 빈도 추이



그러나 여기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아우르는 “전 민족”에서 남한당국, 즉 김영삼 정부는 제외되어 있었다. 북한당국은 “김영삼 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평화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만고역적 김영삼 일당을 단호히 제거해버리고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안기부를 비롯한 파쇼폭압기구들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야 할 것”⁸이라고 선동하였다.

즉 초기 김정일 정권이 내걸었던 “민족대단결” 통일론은 남한당국과의 화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남한당국과 남한 내의 급진세력간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북한당국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하는 전략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은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투쟁 속에서 3자 련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인 범민련을 확대 강화하여 조국통일의 위력한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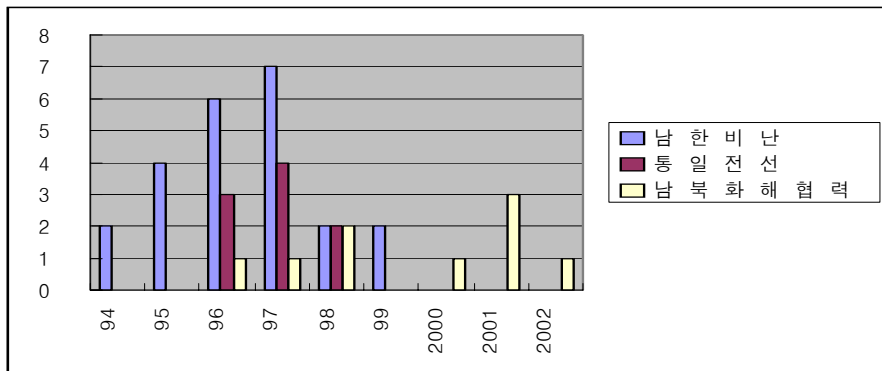
⁸ 『로동신문』, 1995년 4월 19일.

⁹ 『로동신문』, 1995년 5월 5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그것을 반대하는 민족반역세력과의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중략)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만고역적 김영삼 일당을 단호히 제거해 버리고 북남사이의 접촉과 대화, 통일을 가로막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¹⁰

남한당국 배제를 전제로 전개되었던 북한의 민족대단결론은 남한에서 김대중 정권의 출범을 즈음하여 남한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민족대단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98년 5월 북한당국은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림 5> 남한비난·통일전선·화해협력 기사 빈도



위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관계가 냉각되었던 1990년대 초·중반 시기의 민족대단결론은 남한정권을 배제한 것으로 통일전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통일전선에 관한 기사는 자취를 감추고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남북 간 ‘공존, 공영, 공리’ 도모와 전 민족적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남한당국배제의 통일전선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던 김정일 정권 초기의 민족대단결론은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김대중 정권

¹⁰ 『로동신문』, 1996년 4월 6일.

이 집권하자 남북교류 협력의 확대와 남한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남 화해정책으로 전개되어 갔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당국은 민족대단결론을 자주통일론과 결합시키면서 민족대단결을 통한 ‘외세척결’을 내걸며 당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3. 남북한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김정일 정권의 통일정책의 방향은 1997년 8월 4일 김정일의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와 1998년 4월 18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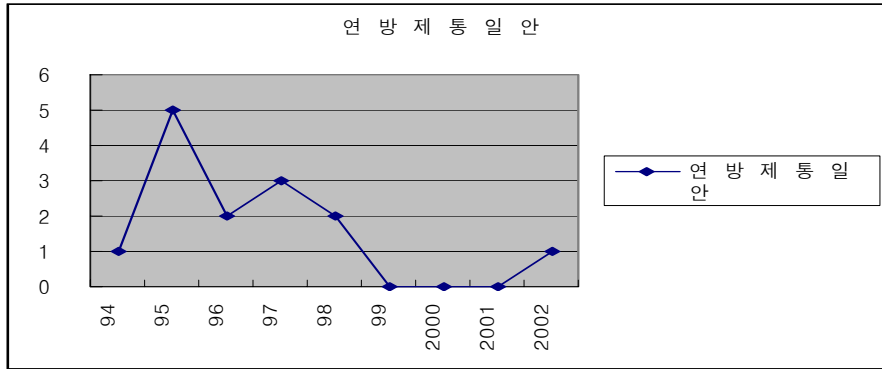
‘8·4’노작은 김정일 명의로 발표된 최초의 통일관련 문헌으로서 김정일의 통일관이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 3대현장”이라고 밝히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김일성 통일노선의 기본원칙들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김정일의 ‘8·4노작’이 발표된 직후 로동신문 사설은 김정일의 노작이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동 강령”이라고 평가하였다.¹¹

그러나 이미 1995년 8월 18일 로동신문은 <민족통일 대축전을 90년대 연방제 통일로 이어가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연방제통일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 사설은 동년 8월에 열린 대 민족회의를 총평하면서 그 의미를 “온 겨레의 일치한 통일염원과 지향을 담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할 데 대하여”를 의정으로 상징하고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여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이 우리 민족의 공동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일치하게 확인”한 사건으로 평가하며 “나라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합의 확정된 연방제방식에 의한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

¹¹ 『로동신문』, 1997년 8월 21일.

쳐나가야 할 것”임을 호소했다.

<그림 6> 로동신문 사설의 ‘연방제통일안’ 게재 빈도



또한 남한당국의 남북연합방안을 ‘반민족적인 분렬론’, ‘힘에 의한 반공, 반북 통일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대 민족회의는 련방제 통일에 배치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남북 련합제방안>을 민족의 총의를 외면하고 당국의 독선에 따른 <제도통일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족의 분렬을 남북의 합의로 고착화시킬 것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분렬론, 힘에 의한 <반공, 반북통일>을 노린 동족상쟁의 전쟁론으로 단호히 배격하였다.¹²

북한당국의 연방제통일안에 대한 강한 주장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그러한 우려는 로동신문 지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1997년 로동신문 사설은 “우리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연방제 통일밖에 없다”고 하며, “북과 남, 해외의 통일단체들은 전 민족적 범위에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지지자 대대열을 계속 늘여나가야 하며 분열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제도 통일론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본질을 폭로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시 민족대단결론을 기치로 내걸고 구축하고자 했던 통일전선의 한 목적도 남한당국의 흡수통일론에 대한 방어적 저항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¹² 『로동신문』, 1995년 8월 18일.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남북한이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던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상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로서 남북한의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¹³ 북한 당국이 그 이전까지 남한의 ‘남북연합’제안을 “구조형태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구라파 공동체류의 반통일적인 1민족 2국가 2체제적 구도”라고 매도하였던 과거의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0년 10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을 기념해 열린 평양시 보고회 연설에서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일성 주석이 1991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방안이라고 확인했다. 안경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¹⁴

2002년 7월 4일 로동신문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한의 연합제의 공통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서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그 길밖에는 없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외견상 용어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상 남한의 국가연합과 적지 않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¹⁵ 그러나 남한

¹³ 고유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외교』 (2003.12), p. 76.

¹⁴ 위의 논문, p. 77.

¹⁵ 예컨대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설명하면서 ‘중앙정부’라는 용어대신 ‘민족통일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자치정부’라는 표현대신 ‘북과 남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남북한에서 두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는 사실은 대내외적 통치권의 소재 및 병력의 보유라는 기준에서 볼 때 연방보다

이 과도체제로 내놓은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 목적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통일방안에서의 궁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처음으로 상대방의 제안을 수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구도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민족끼리’ 담론과 민족 공조론의 제기

2000년 6·15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한당국은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을 유포시키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¹⁶ 로동신문 사설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이 등장한 것은 2001년 3·1절 기념 사설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일·애국역량의 화합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은 북한당국이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자주통일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자주통일론이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북한주도의 통일전략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이 전개되는 ‘우리민족끼리’ 통일론은 남북의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자는 다분히 방어적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온 민족은 자기 힘을 믿고 통일운동실천에서 확고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문제에 끼어들어 제 리속을 채우려는 외세의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민족자주력량의 공조와 연합으로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¹⁷

2001년 북한의 공화국정당, 사회단체들은 연초에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을 여는 해>로 지정하며 남북공동선언을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을 민족과 세계 앞에 선언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선언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해 민족공조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¹⁸ 즉 북한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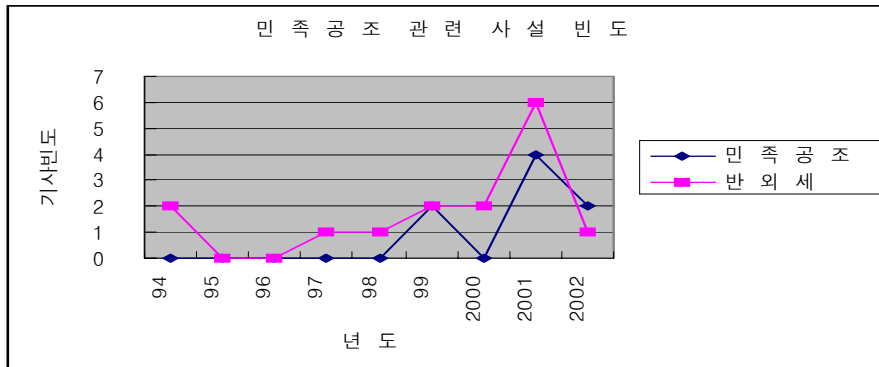
는 국가연합에 훨씬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호성, “북한통일정책연구의 쟁점,”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2004).

¹⁶ 로동신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자!>(2001.1.12),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2002.2.10), <부쉬행각 저지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2002.2.19) 등의 구호문을 게재하면서 ‘우리민족끼리’ 담론을 전파하였다.

¹⁷ 『로동신문』, 2001년 3월 1일.

은 미국의 강경정책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민족공조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

<그림 7> 민족공조 관련 로동신문 사설 빈도



위의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공조론에 대한 주장은 반미·반외세 주장과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민족공조의 주요 내용도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반외세에 대한 호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1년 1월 20일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기대했던 북미관계 개선은 큰 차질을 보이게 되었다. 2002년 미국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대북강경노선을 천명하자 북한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제의 반공화국대결책동과 새전쟁 도발책동은 현 부시행정부에 와서 더욱 로골화, 악랄화되고 있다. (중략) 미제호전세력의 북침광증은 우리 공화국을 공공연히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러>와 연결시키며 우리에게 대한 핵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미일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과 공조하며 외세의존과 민족의 영구분렬에서 살 구멍을 찾는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¹⁸

북한당국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민족공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 즉

¹⁸ 『로동신문』, 2001년 6월 15일.

¹⁹ 『로동신문』, 2002년 6월 25일.

“북과 남 전체인민들이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끼리 뜻과 의지, 힘을 모을 때, 미제가 발붙일 틈이 없게 된다”는 논리를 통해 남한당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할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 담론을 통해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미군철수를 통해 북한주도의 통일을 이룩하고자 했던 북한당국의 자주 통일론은 김정일 정권에 들어서면서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을 통해 미국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다분히 방어적 논리로 변화하였다.

IV. 결 론

이상에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일관련 주제의 로동신문의 사설과 구호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대남·통일정책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분석은 1994년부터 2002년이라는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인 김정일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분석시기에 있어서 제한성을 갖는다. 그러나 비록 제한된 기간이기는 하나, 이 기간은 김정일 권력승계와 남북정상회담의 전후과정의 북한 대남·통일정책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분석 시기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통일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일 정권 전 기간을 통해 북한당국은 민족대단결론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초기의 경우, 남한당국을 배제하면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남한자본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반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강경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민족대단결론은 ‘우리민족끼리’ 담론과 함께 ‘민족공조론’으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북한당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합의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한당국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대남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북포용정책을 천명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비난 일변도로 대처하였던 남한당국을 대화의 상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

관계에 부여되는 의미가 북한당국에게 있어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북한당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남한과의 갈등 유발과 적대의식 고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고 보여 진다.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대남정책 역시 국익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변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탈냉전예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몇 차례에 걸친 긴장국면을 조성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의 가능성 또한 상존해 있다. 특히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마저 점차 불투명해져감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많은 난제가 예상된다. 그러나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 접근 동기는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도 하다. 북미간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북한이 ‘민족공조론’을 강조하며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대하는 북한당국의 인식과 입장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시점에서 한국정부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보장을 위한 과도한 방어기제로 촉발된 것임을 미국측에 설득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핵 포기를 대가로 체제유지를 보장받고 경제지원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설득해야 한다.

위기와 전환의 국면에 놓여 있는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느냐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이상 한국이 국외자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등 물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남북 간 신뢰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한 남한의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접수: 4월 1일 / ■ 심사: 6월 2일 / ■ 채택: 6월 20일